

## 북한 이탈주민과 다층적 타자화 현상: 대한민국 국가 형성 과정과 한국 정체성 정치를 중심으로

김호수 레이든대 국제 관계학과 대학원생  
(Leiden University International Relations)

### 논문 요약

본 연구는 남한에 정착한 북한 이탈주민들을 남북한 사이의 지정학적 역동성을 나타내는 ‘분단 체제’ 속 공생적 관계를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비국가 행위자로 본다. 이들을 둘러싼 사회적 담론은 분단체제라는 특이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 대한민국 국가 재건을 위한 국익을 내포해 왔으며, 역사적 관점으로 본다면 한국 전쟁 이후 남한 사회 내에서 북한 이탈주민들을 정의하고 재현하는 방식은 각 시기별 대한민국 정부의 사회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변해왔다. 최근 대한민국 통일부를 중심으로 정부 기관에서 추진한 탈북자 정책들은 하향식 거버넌스, 특히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훈육적 권력’ 형태에 기반한 통치 방식으로 남한 특유의 신자유주의 모델을 강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또한 북한 이탈주민들의 등장은 그동안 ‘한민족’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했던 남한의 민족 정체성에 큰 혼란을 초래했고, 한국 사회는 그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국가 정체성을 재구성했다. 냉전 이후 남한의 국가 정체성이 북한 체제를 반대하며 형성된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사회 속 북한 정착민들의 존재가 점점 부각되면서 남한 국가 정체성은 도덕적 타자화 과정을 수반한 ‘위계적 민족성’이라는 새로운 구조로 계층화 되었다.

한국의 민족성은 여전히 국가 집단으로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위계적 개념에 따라 다시 형성됐다.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북한 이탈주민들을 방 밖으로 내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3의 사회적 공간을 들여오는 수직적 구조를 도입하여 사다리를 계층화 시키며 민족적 경계선을 재조정했다. 이 형태는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R. O’G. Anderson)이 말하는 ‘상상 공동체’의 국가 집합체로서 모양을 여전히 유지하면서도, 그가 말한 “수평적, 횡적 민족의식 모델”의 세부 특징과는 상반되는 계층적, 수직적 모델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그 결과,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한 다층적 타자화 현상의 영향을 받은 한국인들의 정체성 정치는 최근 패셔너블한(fashionable)한 문구로 여겨지는 “민족국가와 국민국가의 비동조화”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오히려 민족-국가 결합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재조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는 최근 국가 간의 인구 이동이 증가하고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가 새롭게 변화하는 세계화 현상에 대한 논의와 대조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인간됨을 천명한 성경의 가르침(갈 3:28)을 기억하며, 북한 이탈주민들의 등장이 현재 분단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국가 정체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근본적인 탐구가 필요하다.

## I. 서론

저는 북한에서 탈출하던 중 엔지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경찰에게 발각됐어요. 도망치다 건물 4층까지 올라갔는데 뿔 곳이 없는거예요. 이제 죽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경찰들은 총을 들고 올라온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뛰어내렸어요.(채널A, 2020).

한국 텔레비전의 지상파 채널을 돌려볼 때면, 위와 같은 북한 이탈주민들의 극적인 이야기가 예능 프로그램의 주요 주제로 다뤄지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화면에는 북한에서 온 정착민들이 등장하며, 그들 각자는 북한에서의 삶과 그들의 탈북 여정을 가장 무섭고 치명적인 방식으로 재현된다. 2014년에 미디어투데이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가장 인기 있는 케이블 채널인 JTBC에서 탈북자 여정이나 북한에서의 ‘끔찍한’ 일상을 4개월 동안 총 106회 방송되었다(정철운, 2014). 지난 2017년 7월에 열린 특별 심포지엄 ‘탈북민 3만명 시대, 방송을 말한다’에서 발제를 맡은 박현선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도 “종합편성채널의 운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매체와 채널은 많아졌지만, 거기서 표현되는 탈북민의 이미지는 다양성보다는 획일화 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구보라, 2017).

남북 분단 이후 지난 70년 간, 한반도는 완전히 다른 두 나라로 발전했다. 한국은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정부로 성장했고,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배타적이고 독재적인 사회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냉전 시대에서 탈냉전 시대로의 전환은 특히 그에 상응하는 다양한 사회 정책과 담론의 변화 측면에서 한반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이러한 상황은 남북한 사이의 지정학적 역동성을 나타내는 ‘분단체제’라는 개념을 낳았다. 백낙청(1994: 14-15)에 의하면, 분단체제는 “단순히 국토가 갈라졌다는 게 아니라 갈라진 남북이 묘한 공생관계를 가지면서 스스로 재생산하는 힘을 지닌 체제”이다.

이 논문은 남한에 정착한 북한 이탈주민들을 이러한 ‘분단 체제’ 속에서 공존하는 정치적 관계를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비국가 행위자로 본다. 북한 이탈주민들을 둘러싼 사회적 담론은 이 특정한 이 특정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한국의 국가적 이익을 얼마나 내포하고 있는가? 나아가 북한 이탈주민들의 등장은 한민족 개념이라는 측면에서 남한의 민족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물론 북한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왔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지만, 남한의 현대사를 들여다봤을 때 북한 이탈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정의하고, 이름 붙이고, 재생산하는 과정이 대한민국 정부의 사회정치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끼쳐왔다는 사실은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다(Kim, 2012).

한국에서 북한 이탈주민들의 역할은 냉전시대 독일 국경을 넘어 대규모로 탈출하던 동독 탈북자들의 상황과 현저히 다르다(박영자, 2005). 동서독 간의 비교적 유동적인 이동은 독일이 점차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게 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남북한의 배타적 관계와 서로에 대한 제한된 정보는 두 독일 국가 사이에 가능했던 끊임없는 소통과 교류와 굉장히 다르다. 김명준과 임종섭(2015)은 “북한 네트워크와 남한 네트워크의 교차점에 북한 이탈주민이 서 있기 때문에 이들의 독특한 역할을 간과할 수 없을 것” 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카스텔(Castells, 2009: 471)의 ‘네트워크 사회’ 이론을 인용하며 북한 이탈주민들이 ‘권력의 도구’로서 제한된 남과 북 네트워크를 “근본적

으로 형성하고, 안내하고, 때로는 왜곡하는 ‘스위처(switcher)’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남한에 정착한 이탈주민의 민족적 지위를 삼중 구조에 머물게 한다. 그들은 최대의 적(북한) 혹은 외부인(외국인 이민자)으로 여겨지지 않는 동시에 완전히 ‘우리’의 일부도 될 수 없다. 이렇듯 북한 이탈주민들의 지위에 대한 심층적 분석은 대한민국 국가 구조 자체에 대한 중요한 함의를 내포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이 글은 앞서 언급한 분단체제의 틀 안에서 탈북자들의 지위가 한국의 근대적 국가 형성 과정이나 국가 공고화(state-consolidation) 메커니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타리(Kothari, 1976: 11)는 사람과 빈곤 보호, 정부기관 및 정책 수립, 그리고 자원 추출을 제3세계 국가 건설 과정에 필수적인 세 가지 주요 기능을 언급한다. 이 논문은 남한 정부가 북한 정착민의 지위를 다루고 이용하는 방식이 이 세 가지 기능에 크게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남한 사회 속 북한 정착민을 둘러싼 사회적 담론들은 국가 안보에 대한 국가의 사전 고려, 정부 기관의 역할, 그리고 정착민 개개인을 인도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대상으로 보는 방식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남한과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는 한국 현대사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된 감이 없지 않으며, 21세기 초에서야 비로소 학문적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정병호, 2004; 조영아, 전우택, 2005). 이는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특히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탈북민들이 급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이전에 실시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사회 부적응 혹은 문화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당시 연구들은 북한 이탈주민들을 획일적인 탈출 동기를 가진 사람들로 보는 한편, 북한 이탈주민 개개인이 남한 사회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다. 그것은 정착민들의 사고방식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는데, 특히 그들의 사회 부적응은 단순히 심리적 문제 혹은 장애로 접근되었다 (이기영, 엄태완, 2004; 전우택, 2000).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빈곤, 복지 제도, 고용 불평등, 남북 문화 차이 등 인도주의적 문제로 연구 대상이 확대되기도 했다 (이기영, 2005; 정정애, 손영철, 이정화, 2013). 그러나 북한 이탈주민 이슈에 대한 관점은 여전히 개별 사례를 기초로 하는 연구를 벗어나지 못했다.

학계가 ‘분단 체제’의 정치 역학 구조를 통해 이 문제를 조명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이후다. 이러한 학문적 전환은 보다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남한 국가를 세울 필요성이 커지면서 나타난 정책 방향의 전환과 함께 일어났다. 북한 이탈주민 집단은 한국 정치에서 중요한 비국가적 행위자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특히 그들이 남한의 일상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수정, 2017; 신난희, 2019).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여전히 마이크로 렌즈(micro-lenses)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정 북한 이탈주민 집단이 어떻게 단순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통제되는지를 드러내는 구체적인 사례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강진웅, 2011). 정부가 증거를 조작하여 탈북자를 간첩으로 몰거나, 특정 탈북자 집단이 보수 단체로부터 돈을 받고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는 등 탈북자 집단과 국내 정치 집단 간의 상호 이익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김화순, 전태국, 2018; 신난희, 2019). 그 결과,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이슈는 현대 한국 정치에서 진보와 보수 간의 타협 불가능한 논쟁주제로 취급되곤 한다.

그러나 이 논문은 이 문제에 대한 보다 큰 역사적 그림을 향해 렌즈를 넓힘으로써 더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북한 정착민들을 둘러싼 정치적 책략과 긴장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사례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이러한 정착민들의 민족적 지위가 남한 정체성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른바 ‘분단 체제’ 내 국가 건설 과정을 어떻게 강화 시키는지 보게 된다. 또한 남한의 정체성이 북한 국가 체제를 반대하며 형성된 점을 고려할 때, 최근 북한 정착민들의 존재가 점점 부각되는 것이 기존 민족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며 현재 삼중 구조로 나뉘는 남한의 민족 개념을 분석해본다 (Seol, Skrentny, 2009; 전재호, 2012; Zhe, 2020).

이러한 분석은 뉴스 기사, 국가 정책 보고서, 또는 인터뷰와 같은 1차 자료를 약간 활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주로 영어와 한국어로 된 2차 자료를 바탕으로 쓰였다. 개인 인터뷰 자료는 저자가 직접 북한 이탈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만들어졌으며, 북한 정착민들의 실제 일상과 삶의 배경에 대한 경험적 주장을 구체화하는데 사용된다.<sup>1)</sup> 이 논문은 총 네 부분으로 나뉜다. 1장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남한에 정착한 북한인들의 역사를 간략하게 다룬다. 냉전에서 탈냉전 시대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들 탈북민 집단의 위상이 어떻게 국가 이익과 세계 질서의 물결 변화에 크게 좌우됐는지를 역사적으로 설명한다. 2장에서는 대한민국 통일부를 중심으로 정부 기관에서 추진한 특정 정책들을 살펴본다. 하향식 거버넌스의 방식은 어떻게 남한의 ‘주는 이’와 북한 이탈주민들의 ‘받는 이’ 사이에 이분법을 희생시키면서 정착민들의 정체성에 영향을 끼치는가? 어떻게 남한의 신자유주의 모델을 강화시키는가? 3장에서는 한국 민족 담론이 보통의 한국인들에 의해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북한 정착민들은 기존의 한민족 담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한국 정체성의 계층적 범주를 구성하는 여러 층에 대해 살펴본다. 민족적 서열체계에서 ‘도덕적 타자화’ 과정의 기초가 되는 개념은 무엇이며, 어떻게 현대 대한민국 국가 형성 과정을 강화시킬까?

더불어 이 논문은 북한에서 탈출해 남한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해 ‘북한 이탈주민’ 혹은 ‘정착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들은 ‘새터민’ ‘난민’ ‘탈북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왔지만, 각각의 용어가 암묵적으로 함축하는 의미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난민’은 북한 땅에서 탈출하여 현재 중국이나 일부 동남아 국가, 혹은 유럽 국가로 간 사람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며, ‘탈북자’는 이들을 적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뉘앙스를 풍길 수 있다 (Kim, 2012). 이에 본지는 남한 사회에 정착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담론에 집중한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북한 이탈주민’ 혹은 ‘정착민’이라는 개념을 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 I. 근대 국가 형성과 북한 정착민의 역사

요즘은 매년 1000명에서 3000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들어와 정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1세기 초부터 지금까지 지속된 현상이다 (대한민국 통일부, 2021). 비록 남한 전체 인구를 따졌을 때 엄청난 숫자로 보이지는 않겠지만, 북한 이탈주민들을 다루는 사안이 남한 사회에 점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죽음을 맞은지 두 달 만에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 정착민과 여섯 살짜리 아들의 사연이 언론에 공개됐을 때 한국

1) 이 인터뷰는 2020년 10월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VU Amsterdam)에서 국제분쟁과 평화학 수업 중 "한국 내 탈북자"라는 단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현재 한동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에 재학 중인 조하늘 학생의 도움을 받아 한동대학교 내 북한 탈북민 단체들과 접촉할 수 있었고, 그 단체들을 대표하여 총 두 명의 북한 정착민들과 인터뷰를 했다.

사회는 충격에 휩싸이며 북한 이탈주민들의 빈곤과 복지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높아졌다 (선담은, 서혜미, 2019). 또 2020년 몇몇 탈북자 단체들이 군사분계선 너머로 대북전단을 날리려는 문제는 한국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만든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결국 문재인 정부가 전단 살포를 금지하게 됐다 (손진석, 2021). 사회경제적, 인도적, 정치적 문제에서부터 북한 정착민들은 한국 사회에서 첨예한 논의를 이끌어내는 비국가적 행위자 역할을 한다.

이 장에서는 북한 이탈주민들에게 부여된 각기 다른 이름과 국가 인센티브의 역사를 잠깐 살펴봄으로써, 한국전쟁 (1950-1953) 이후 변화하는 정부의 요구에 정착민들의 정치적 담론이 얼마나 크게 의존했는지를 알아본다. 근대 한국 정치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과감한 전환을 경험했던 반면, 북한 이탈주민 문제는 각 정권의 이익에 잘 부합하는 효과적인 공통분모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부는 항상 정착민에 대한 특정 인식을 통제하고 국민에게 전파하는 중심 주체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북한 이탈주민들은 한반도의 역동적인 분단 정치 하에 끊임없이 정치화되는 대상으로 자리매김했다.

한국의 국가 건설 초기 단계는 외부의 영향에 취약한 작은 반도로서 변화하는 세계정세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일본의 침략은 일제 강점기 (1910-1945) 때 비로소 정점에 달했고, 뒤 이어 한국전쟁으로 인해 한반도는 냉전 시대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 되어버렸다. 1948년 대한민국 의회 설립으로 근대적 민족국가 형성이 공식화되었지만, 해방 전후 국가의 미래에 대한 논의에서는 친미 자유주의자들과 친소련 공산주의자들 간의 긴장이 팽배했다. 국가 지도자들 간의 새로운 국가 건설의 성격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정치적 양극화를 지속시켰다 (Kim, 2009). 1948년 국가보안법이 공산주의자에 대한 광범위한 숙청과 급진 공산주의 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은 그 당시 정치 갈등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드러낸다. 지난 수십 년간 일제의 권력 공백으로 이해 긴장은 더욱 심해졌다.

이런 맥락에서 6.25 전쟁 발발은 오히려 친미 당국이 한국에 대한 자신들의 비전을 정당화하고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 전쟁과 국가 건설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는 근대사 속 서구의 국가 건설 과정 또한 전쟁을 통해 이익을 얻었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Tilly, 1990: 83). 한국전쟁은 흩어진 논의와 권력을 친미 성향의 남한 정부로 집중시키며 공산주의 '적'과의 확고한 결별을 선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또한 새로운 남한 국가 건설을 위해 인적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야 했던 정부의 어려움도 완화시켜줬다 (Kim, 2009). 전쟁은 이후 이어진 모든 남한 정권에 영향을 끼칠만한 강력한 반공, 안보 기반 의제로 국가 정체성을 고정시키며 이념 투쟁의 혼돈을 달래는 역할로 작용했다.

1950년대 전후 국가 건설 초기에는 국가 질서와 기반시설을 복원하는 것은 물론, 남한 정권의 우월성을 끊임없이 입증하고 정당성을 얻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 6.25 전쟁은 한국이 근대적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반공권의 공식 구성원으로 여겨지는 전환점이 되기도 했다. 글로벌 냉전의 긴장이 강력한 봉쇄 전략으로 고도된 시기이기도 했기 때문에 특히 미국이 중국(1949년)과 한국(1950년)에서의 연속된 전쟁을 통해 위협을 느낀 후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정권 간의 치열한 경쟁의 틀이 더욱 정당화 될 수 있었다. 특히 친미 성향을 띄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주의를 국가 정체성에서 '일상적 이념'으로 확대하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Kim, 2012). 이때부터 정부 당국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수집해 활용하기 시작했다.

1950-1960년대 남한에서는 국경을 넘어 입국한 탈북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북한 정권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전쟁 중에 이미 남쪽으로 탈출한 반면, 전쟁 직후 남한에 도착한 사람들은 겨우 군 경계선을 넘어설 수 있던 군인뿐이었다. 스스로 국경 넘기를 선택한 이들은 당시 한국전쟁 혹은 심지어 반일 투쟁의 영웅이었던 민족적 애국자들과 같은 배우를 받았다. 그들의 용기와 특히 북한 주민 정체성에 대한 '자발적 포기'는 남한에서 많은 환영과 찬사를 받았다 (Kim, 2012). 1962년 제정된 '국가유공자 및 탈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당시 정착민들이 어떻게 영웅으로, 심지어 남한 정권의 우월성과 승리를 입증하는 '살아있는 증인'으로 취급됐는지 보여준다 (박영자, 2005). 국방부의 면밀한 감시와 심사를 받으면서 탈북자들이 한국에 도착하면 정부의 지원금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과거 북한에서의 신분과 부합했다는 것도 흥미로운 사실이다 (Kim, 2009). 따라서 각 탈북자들의 '영웅적 위치'는 북한에 대해 얼마나 '전복적인지'에 따라 측정되었다. 특히 전직 북한 고위층 군인들이 가장 추앙 받는 용맹한 영웅으로 평가되는 것을 보면 이 문제가 국가/안보 이슈와 얼마나 강하게 연계됐는지를 알 수 있다.

1960년대 중반부터 대한민국은 쿠데타로 인한 군사정권이 수립되었다. 박정희와 전두환이라는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의 확실한 우선순위는 군사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북한 정부를 민족 통합과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마화했던 기존 정서에 더해 권위주의적 이해관계의 궤도에 맞춰 북한 정착민들의 증언을 기구적으로 설계했다. 우선 1978년 신설된 "탈북군인 특별보상법"은 북한 생활과 탈북 여정에 대한 개인적 증언을 강조하기 위해 언론을 동원하며 군인들을 다른 애국자나 참전용사와 분리시키기 시작했다. 이들 정착민들의 이야기는 "개인의 행복을 위해 탈출한 것이 아니라 반공 사회의 충실한 일부가 되기 위한" 동기에 집중했고, 이어 "통일의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 주를 이뤘다 (Kim, 2009).

또한 군사정권은 북한 이탈주민들의 이야기 중 북한 침공 계획을 공개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도 했다. 1983년 탈북자 이웅평은 과거 북한 공군 소령으로 재직하던 당시 북한의 전쟁계획 내용을 직접 목격했다는 증언을 내놓았다 (동아일보, 1983). 북군의 야망을 끊임없이 비난하는 전 병사의 감정적인 어조는 공포와 국가 군사 보호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고, 이는 바로 정부가 체제 정당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로 했던 것이었다. 이 병사는 13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운집한 귀순환영대회가 열린 가운데 정부로부터 특별 보상을 받았다. 그리고 새로운 탈주병이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Kim, 2009). 당시 데탕트 이후 미국과 소련 사이에 고조된 긴장 덕분에 군사 정부가 이런 이념 갈등의 요소들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었다 (박흥서, 2011).

마침내 1991년 소련이 붕괴되고, 1994년 김일성 사망과 1995년 대홍수 등 잇따른 국가재난으로 북한을 이탈하는 사람들이 급증했다. 1990년대 후반, 남한에 정착한 북한 이탈주민의 수는 매년 1,000명 이상까지 치솟았다. 대규모 유입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이전에는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던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의 '기적적' 경제 개발에 대한 정보가 은밀히 흘러 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탈북자들의 배경을 점차 다양화시켰다. 국경을 넘을 줄 아는 군인만 탈북을 시도하던 과거와 달리 중국이나 동남아 등 다른 제3의 국가를 경유하는 대체 루트를 이용해 국내로 정착하는 사람들도 늘었다. 처음으로 남한 국민들은 군인이나 고위 관료가 아닌 평범한 북한의 노동자들과 마주하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남한에서는 '연약한' 동포들을 '보호'해야 하는 한국인

들의 인도주의적 책임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는 마치 우연처럼 대한민국 시민사회가 군사정권에 대항하는 민주주의 혁명에 성공하여 자유와 인권, 복지 정책 등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주 정부가 수립된 시기이기도 하다. 정부는 '영웅적' 북한 이탈주민들에게 주어지는 국가 혜택과 보상의 양을 줄인 후 그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초점을 전환했다. '가난하고' '희생양인' 정착민들의 삶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은 복지의 질을 높이고 인도적 가치를 증진하는 민주 정부의 우선순위와 핵심 가치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있었다 (강진웅, 2011). 하지만, 다음 장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다뤄지겠지만, 이러한 정부의 태도 또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담론을 경제적 이주민에 대한 문제로 국한시키면서 이들의 존재를 더욱 정치화될 뿐이었다 (박은아, 2017). 한반도가 '분단 체제' 속에 머물러 있는 한, 북한 이탈주민 문제는 항상 남북한의 갈등 및 공생하는 관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 II. 하향식 거버넌스, 신자유주의, 그리고 국가 형성

2010년, 한국 정부가 북한 이탈주민들의 새로운 삶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예산을 늘리면서 그들은 남한 사회에 특별한 관심사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에 따르면, 2007년 500억원에 불과했던 정착민 정책과 사업 예산이 2010년에는 1,000억원 이상으로 증가했다 (김화순, 최대석, 2011). 이러한 변화는 일반적으로 당시 대규모 북한 이탈주민 유입으로 인한 정부의 대응으로 여겨지지만, 강진웅(2011)은 더 넓은 정치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20세기 정착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가 여전히 유효했다고 믿는다. 정부는 '전사들'의 용맹함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동시에 그들의 (여전히) 의심스러운 정체 또한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21세기 초는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 사회의 요구가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정부의 복지 정책과 인권 추구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정부가 이중적 태도가 국내 정치 정서와 같은 선상에 머물러야 할 필요가 있었다. 북한 이탈주민들이 갑자기 증가하는 것을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보다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통치 방식을 도입해야 했다 (강진웅, 2011). 더욱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 구조조정 이후 한국의 경제체제는 신자유주의로 크게 기울었다. 정부는 정책을 민주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계획으로 보다 설득력 있게 만들기 위해 보호, 재사회화, 정착 지원 등의 개념을 사용하여 북한 이탈주민 정책의 주요 목표를 재정립하기로 했다.

이 장에서는 대한민국 통일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기관들이 이탈주민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는지를 상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앞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 내 정착민 담론의 역사는 각 시대별로 국가가 어떻게 담론을 사용하여 국익을 추구했는지를 보여준다. 이 장은 최근 정착민들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국가사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북한 이탈주민들을 부르고, 이름 붙이고, 그들을 둘러싼 아젠다를 형성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비록 이전의 연구들이 현 정착민 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한국 신자유주의 국가 건설 과정에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특히 개발 중심적 사고와 뒤섞인 냉전 이념의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추가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정광호, 김민영,

금현섭, 2010; 송은희, 신은성, 2012).

2010년부터 정부는 북한 이탈주민들의 입국을 위한 정교한 개혁을 시행했다(강진웅, 2011). 이탈주민들은 대한민국 땅에 첫 발을 들여놓은 순간 곧바로 국가정보원으로 보내졌다. 그들은 신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했다. ‘안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보장된 후에 그들은 정착민 적응에 필요한 모든 교육을 담당하는 정부 산하 기관인 하나센터로 파견됐다. 3-6개월간 남한의 문화, 생활양식, 사고방식, 정치, 노동 환경 등에 대해 배우고 나면 비로소 북한 이탈주민들은 자유를 얻는다. 최근 학계에서는 조금 더 분권화된 정착민 정책 구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고도로 중앙집권화 된 시스템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김화순, 2019).

그러나 북한 이탈주민들이 하나센터를 나와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 정부는 보호, 재사회화, 정착 지원이라는 이름하에 그들의 삶에 (직접적이던 간접적이던) 계속해서 개입한다. 특히 통일부는 ‘탈북자 정책 마케팅’ 과정의 일환으로 북한 이탈주민들을 향한 위로부터의 이름 부르기 방식을 이용한다. 먼저, 지난 2014년 통일부에서 진행한 정책 사업은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착한 이웃’이라는 표현에 초점을 맞추었다. “착한着韓 우리 이웃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착한着韓 공감” 등과 같은 슬로건 아래 통일부는 ‘착한’이라는 단어의 중의적 의미를 활용해 ‘착한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남한에 정착한 북한 이탈주민들의 삶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내세웠다(남북하나재단, 2015). “착한 이웃” 사업은 하나센터 홈페이지 포스터나 통일부 이름으로 발간된 책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개됐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북한 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정착 이야기를 다루는데 있다. ‘가난한 탈북자’로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남한 역양으로 말하고, 다양한 노동 기술을 터득하고, 고용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능력을 기른” 이들이 무사히 ‘우리’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 극적인 서사에 모든 사례들이 집중된다(남북 하나재단 공식 블로그, 2019). 이 같은 전개는 주로 정부가 ‘북한 이탈주민 생활 이야기 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결과물이기도 했다(박은아, 2017).

두 번째로, ‘먼저 온 통일’이라는 용어는 정부와 대통령 같은 고위 정치인들이 북한 이탈주민들을 이름 부르기 위해 자주 사용된다. ‘먼저 온 통일 프로젝트’ 또한 통일부 정책 온라인 홍보의 일환으로 쓰였던 동시에 남한에 정착한 북한 주민들의 성공적인 적응이 마이크로 통일(micro-reunification)의 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이는 정부의 성공적인 미래 통일 모델이 북한 이탈주민들의 일방적인 재사회화 과정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특히 정착민들에게 남한 고용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기를 요구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내각 회의 중 북한 이탈주민들을 지칭하여 직접적으로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 이라고 언급했다(김병연, 2016). 이처럼 정착민들을 향한 위로부터의 이름 부르기 방식은 북한 이탈주민의 정체성에 대한 비자발적 혹은 강제적인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주요 홍보영상 또한 북한 이탈주민들의 고정된 정체성을 재현한다. 영상 속 정착민들은 매우 열심히 일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며 기존 한국 고용주들이 갖고 있던 ‘게으르고 영어를 못하는’ 이탈주민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해낸다(통일부 UNITV, 2020). 그들은 편견에 굴복하지 않고, 필요한 기술을 갖추고 영어를 배우기 위해 “조건 없이 열심히” 노력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성공적인 한국 정착 모델은 한국 사회 내에서 완벽하게 자신을 재구성하고, 치열한 노동 시장 속 경쟁을 통과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기술을 갖춘, 탈바꿈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강진웅(2011)과 박은아(2017) 등 일부 한국 학자들은 푸코(Foucault, 1977: 231)의 통치성 이론의 렌즈로 정착민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를 분석한다. 그들은 정부 정책이 푸코가 말하는 훈육적 권력, 즉 개인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코드화하여 상시화” 하는 권력, 을 사용하는 형태를 띤다고 말한다. 정부가 북한 이탈주민들을 통치하려는 경향은 노골적으로, 강압적으로, 부정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권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이 스스로 ‘자기 규율’을 하도록 유도하는 미묘하고 온화하며 생산적인 힘이 가해지고 있다. “착한 이웃”과 “먼저 온 통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는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이탈주민들에게 이상적인 이미지를 끊임없이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처음에는 정부 사업과 하향식 이름 부르기 방식에 의해 작동되지만, 이 모든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착민들이 남한 시민, 정부, 그리고 심지어 한국 고용주들에게 ‘착한’ 혹은 ‘좋은’ 이웃으로 인식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정착민 집단에 대한 일방적인 이미지는 ‘우리’사회에 동화되기 위해 애쓰는 정착민들을 타자화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화 시킬 수 있도록 하며 남한 사람들의 의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왜 ‘자기 규율적’ 정착민 집단을 필요로 할까? 분단 체제의 틀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통치 방식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 상태이고, 이는 한반도가 북한 ‘적’에 대한 국가 안보 경계심을 늦출 수가 없다. 그러나 훈육적 권력의 필요성은 21세기 초 남한의 신자유주의적이고 민주적인 전환으로 설명할 수 있다. 권위주의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경제체제에서 민주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국가 경제로의 전환은 국가 내에서 끊임없는 정당성 입증과 국가통합 과정이 필요한 급진적 변화로 여겨졌다.

그러므로 북한 이탈주민들을 지배하기 위한 권력은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기 훈육적’ 방식으로 작동되었다. 그들이 한국 사회 속 성공적인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은 스스로 자율적인 생활습관과 사고방식을 장착시키며 자신을 ‘생산적인 인적 자본’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키우는 것이었다. ‘실패한’ 공산주의 체제 아래 있는 ‘의존적이고 취약한’ 북한 주민들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이 개인이 남한의 시장 경제 체제에 적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훈육적 권력을 사용하는 정부의 핵심적 목표는 정착민들의 정체성을 탈바꿈하게끔 도와주며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시키는 것이 된다. 즉, 박은아(2017)가 주장하듯 정부의 ‘호모 이코노미쿠스 만들기 프로젝트’이다. 민주주의 측면에서 이러한 자격요건은 정부가 북한에서 온 이웃들의 인권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동시에 정부의 복지 정책에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없도록 보장하는데도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강진웅, 2011).

더 나아가, 자기 규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북한 이탈주민은 특별히 한국식 신자유주의 모델을 공고히 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포스트 개발주의 국가, 개발 자유주의, 국가 주도적 신자유주의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한국의 경제 체제 속 국가와 시장 사이의 연결고리는 여전히 반공주의의 뿌리에 영향을 받는다 (김동춘, 2018). 최근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1900년대 후반 국가 중심, 미국 주도 경제 발전의 기원과 반공주의가 현 대한민국 체제를 뒷받침하는 내재적 이념으로 여전히 사용된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힘들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면 현 정부가 경제체제를 통해 반공 성향을 드러내는 방식이 과거와 다른 것이다.

1970-1980년대 군사정권 시대에는 미국의 경제 원조와 군사 지원이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필요한 자본, 시장, 인적 노동의 동원, 국제 무역의 대부분이 미국의 패권 아래서 통제되었고, 미국 주도의 반공 사상은 한국 경제 발전을 지탱하는 정치적 자본의 역할을 했다. 이념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백하고 영향력 있는 조건이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한국이 “공산주의 빨갱이 제거”라는 명목으로 노동권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가혹한 정치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눈감아주거나 심지어 지지하기도 했다 (박홍서, 2011).

21세기 들어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반공 언어는 상대적으로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여겨지지만, 김동춘(2018)은 반공의 언어가 여전히 한국 경제체제를 암묵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공주의는 저항적 노동자의 목소리 등 국내에서 발생하는 반신자유주의 난제들로부터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미묘한 이념적 방법이다. 민영화 정책이나 노조 활동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은 손쉽게 반체제 세력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국가와 시장은 여전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21세기 대한민국의 체제는 개발 중심적 사고방식과 신자유주의의 결합으로 정의될 수 있다 (박홍서, 2011). 북한 이탈주민들이 정부에 의해 ‘악한 북측 정권’에 저항한 용기 있는 동포로 그려진다는 점에서, ‘자율적’ 정착민들은 독립적인 경제적 개인이 되라는 정부의 요구와 국가 발전에 필수적인 반공 사상을 동시에 입증할 수 있는 살아있는 증거로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

정부의 ‘호모 이코노미쿠스 만들기’ 전략은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국가 건설 과정을 지탱해주지만, 한편으로 이 과정은 주는 이와 받는 이 사이의 이분법적 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인지할 수 있다. 김화순과 최대석(2011)은 정부가 북한 이탈주민 정책에 있어 지나치게 일방적인 한국 사회로의 동화에 치중하는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문제 자체를 ‘주는 이’의 일방적인 부담으로 여기는 동시에 ‘받는 이’들은 단순히 수혜자만으로 인식하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강진웅(2013)과 이철우(2011)는 정부가 북한 이탈주민 집단의 사회 경제적 유용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판단함으로써 국가가 점점 더 선별적으로 입국(시민권)을 허가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선별적 허가는 최근 많은 한국인들의 민족적 신념을 지배하던 소위 한민족 신화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정치적/법적 (시민권 부여)인 영역과 사회적 (도덕적 타자화) 영역에서 모두 위계적 민족 형성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계층구조가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 Ⅲ. 한민족 담론과 위계적 민족성

21세기 북한 이탈주민들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따른 혼란은 국가기관들이 통제 기제를 사용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일관적인 국가 정체성에 의존해온 한국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이 장은 이탈주민들의 등장이 남한 사회의 소위 ‘한민족’ 담론에 어떤 균열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그 균열이 어떻게 기존 담론을 수정하여 재생산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것은 노르만 페어클로(Fairclough, 2013: 88)의 비판적 담론 분석(CD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이론의 일부로 그가 제시한 담론 실천(discourse practice)에서 중요한 3가지 과정인 생산, 유통, 그리고 소비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 이론적 틀은 특히 특정 담론이 어떻게 확산되어 한국의 국가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새로운 사회 구조로서 어떻게 꾸준히

정당성을 획득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 국가 정체성의 바탕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단일 민족의 공통된 역사적 신화이다. 민족의 단일한 기원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단일민족’ 한인 사회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민족 전체가 뚜렷한 문화, 역사, 인종적 혈통, 나아가 공동운명까지 공유한다는 사고방식을 기초로 한다 (정영훈, 2010). 설동훈(2020)에 의하면, 한국 민족주의의 근본적 토대는 국가 내 모든 구성원의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강조하는 시민적 개념 (civic conception) 대신 민족 통합에 대한 신념으로 뒷받침되는 강한 민족적 개념(ethnic conception)에 있다고 한다.

이 국가 정체성의 뿌리는 전근대적 혹은 역사적 (초지역적) 현재 또는 과거를 통해 구성원 자격을 추구하는 ‘일형 민족주의’적 성격에 근거할 수도 있다 (Hobsbawm, 1992, pp. 75). 에릭 홉스봄 (Hobsbawm, 1992: 66) 자신도 저서에서 한국이 “민족적으로 거의 또는 완전히 동질적인 인구로 구성된 극히 드문 역사적 국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강진웅(2013)과 같은 최근의 학자들은 한국 민족주의가 초기 국가 건설 과정에서 기능적 필요성에 의해 일형 민족주의적 측면을 수정한 근대적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즉, 1948년 첫 공식 사용 이후 국가 담론으로 꾸준히 사용되어 왔는데, 이는 제1공화국 이후 대한민국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영훈, 2010). 그때부터 이 담론은 현대사를 통해 서로 다른 정치적 맥락과 필요에 따라 국가 경계선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적 정체성과 연대의식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용되었다 (강진웅, 2013). 예를 들어, 민족주의는 1945년 해방 이후 일본의 식민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널리 이용되었다. 남북 분단 시대에 민족주의는 권위주의와 반공주의를 정당화하는 정치적 메커니즘으로 이용되어 적국인 ‘그들’의 정권이 ‘우리’ 단혈 공동체의 통일에 일차적 장애물이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1994년에 만들어진 이후 오늘날까지 통일부 정책의 공식 명칭은 여전히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으로 불린다 (통일부, 2021).

오랫동안 지켜온 이 믿음은 단순히 신화나 정치 전략으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대중 담론의 일부가 되었다. 수많은 한국 TV 프로그램들이 역사적 인물이나 한반도 밖에 사는 교포 이주민들의 가혹한 삶을 감성적인 민족적인 이야기로 언급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정부가 갑작스러운 북한 이탈주민 유입에 대응하기 위한 ‘훈육적’ 권력 시스템을 도입하기 직전인 2000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3%는 자신의 국가 정체성은 “단일 혈통에 의한 것”이라고 답했다 (Shin, 2006: 2).

그러나 남한 영토에 북한 정착민이 갑자기 등장하고 21세기에 그들의 사회적, 정치적 편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민족주의에 대한 확고한 밑바탕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한민족 담론에 따르면, 북한 정착민들은 여전히 ‘우리’의 일부로 여겨져야 할 동포들이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한반도 전체를 관할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북한 정착민들도 여전히 평등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간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2021).<sup>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착민들의 진입 과정에 대한 조건부 수용과 지속적인 의심의 눈초리는 한민족 공동체에 대한 오랜 한국인들의 믿음에 가시적인 균열을 초래했다. 이러한 불일치는 당혹감을 낳았고, 당대 국가의 필요에 따라 국가 담론을 수정하고 재생산할 필요가 있었다. 그것은 신자유주의 경제를 정당화하고,

2)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다.

안보에 대한 우려를 유지하며, 동시에 한국 정부가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했다.

이번에는 국가 엘리트들이 텔레비전 쇼, 국제 행사, 포럼, 그리고 심지어 유엔과 같은 거대 공공 플랫폼에서 담론을 재생산 및 분배했다 (UNHCR, 2021).<sup>3)</sup> 페어클로(Fairclough, 2013: 392)의 이론에서 “가능한 모든 의견들을 이끌어내는” 공공 영역이 어떻게 특정한 담론을 형성하는데 효과적인 인지를 논의했듯이, 공공권(公共圈)은 동질적 국가 정체성에 대한 믿음을 재조정할 수 있는 매우 영향력 있는 방법이었다. 휴와 벨의 연구(Hough, Bell, 2020)는 북한 이탈주민들이 대중적 무대에서 연설하는 것이 어떻게 더 감성적이고 비극적이며 관심을 사로잡는 이야기를 경쟁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그들이 어떻게 남한 사회 속 이탈주민들에 대한 왜곡된 대표성을 지니게 되었는지 분석한다. 이 선택된 이탈주민들은 ‘공적 지위’의 혜택을 부여 받은 뒤, 자신의 민족적 순수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라는 남한 관객에 국한되어 받아들여지는 자신의 ‘북한 정체성’의 모습만을 드러내게 된다. 무대 위 이탈주민들은 북한 체제를 완전히 부정적인 곳으로 악마화하며 그곳을 우리 한민족 사회에서 벗어난 단순한 ‘탈선’으로 강조하고, 이제는 자신과도 분리된 곳으로 나타내며, 남한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자신들의 헌신적인 선택에 집중한다. 이는 이전 장에서 언급한 정부의 ‘훈육적’ 권력이 정착민 정체성을 획일화하려는 노력과 동시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이런 극적인 담론의 연출은 북한 내러티브를 늘 체제경쟁의 틀에서 이야기하던 냉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반면,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들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무대 위에서는 소수 외 나머지 이탈주민 집단들은 더 강한 고정관념과 차별에 시달리게 된다. 휴와 벨 (Hough, Bell, 2020)이 실시한 인터뷰와 포커스 그룹(focus-group) 세션은 공개 증언의 연사로 선정되지 않은 이들 중 상당수가 북한에서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을 되짚을 때도 있지만, ‘북한인’이라는 오명을 받을 위험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했음을 입증했다. 2012년 탈북한 한씨의 인터뷰 내용도 이탈주민 집단 사이에서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그 동안 남한에서의 가혹한 차별과 배척의 감정을 겪어왔다고 언급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북한에서는 사람들이 갈등을 직면하고 빨리 극복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남한에서는 갈등을 회피하면서 상대방을 미묘하게 배제하고 미워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북쪽에서는 싸우지만 결국 친구가 되는데 남쪽에서는 대놓고 대화하지 않는 대신 한 사람이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다고 느꼈어요(개인적 의사소통, 2020년 11월 12일).

또한 그는 평범한 북한 가정환경에서 자라왔다 했지만, 그의 인터뷰 내용은 북한 주민들을 모두 ‘죽음 직전의’ 상황에 처한 것처럼 일반화하는 일반적인 고정관념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었다.

(…) 물론 남한만큼 엄청 맛있는 음식을 찾는 것이 힘들었고, 음식 선택지가 다양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북한에서 모든 사람들이 항상 굶주리기만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개인적 의사소통, 2020년 11월 12일).

따라서 공공 플랫폼에서 펼쳐지는 비극적 서술이 반드시 전체 정착민 집단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었

3) 예를 들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에 80명 이상의 정착민들을 불러 공개 증언을 했다.

다. 오히려 북한 정착민들과의 민족적 관계에 대해 어리둥절해 하는 한국인들에게 납득 가능한 설명을 제공할 대중 담론을 구체화하고 분배하기 위해 선정된 이야기들이었을 뿐이다. 이 결과로 한국 사회는 모든 이탈주민들에게 ‘피해자다운’ 태도를 요구할 명분이 생겼으며, 공적 영역에서는 단일 혈통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며 ‘탈선한 타자’로 프레임화 되는 북한의 요소들을 모두 제거하는 서사들만 유통되었다.

북한 이탈주민들의 등장과 그들을 피해자화하는 담론은 결국 기존의 민족 개념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결국 한국인들을 지탱해주던 민족주의는 설동훈과 스크렌트니(Seol, Skrentny, 2003)가 말하는 위계적 민족성’으로 재구성되었다. 비록 많은 현대 국가들이 민족적 귀향을 하는 이주민들이 등장했을 때 어느 정도 위계적 민족성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이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한국처럼 민족적 바탕이 강한 국가에서는 위계적 민족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한국의 민족성은 여전히 앤더슨(Anderson, 2006: 37)이 말하는 ‘상상 공동체’의 국가 집합체로서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그가 묘사하는 “수평적, 횡적 민족의식 모델”의 세부 특징과는 상반되는 계층적, 수직적 모델에 의해 형성된다.

이철우(2010)의 연구는 한인 이주자들과 북한 이탈주민들의 법적 지위에 집중하는데, 그에 따르면 한국은 민족사적 공동체(volksnation)를 국가 시민권(staatsnation)과 완전히 일치시키는 대신 오히려 둘 간의 긴장을 완화하면서 동시에 ‘위계적 민족’의 질서 속 이주자들의 종속적 위치를 가시화하기 위해 ‘재외 동포’라는 새로운 법적 범주를 만들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규정과 자격들을 제시했다. 북한 이탈주민들의 경우는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보호법에 따라 법적 지위가 제한되고 다른 남한 시민들과 차별화되었다. 그들의 군 복무는 절대 허용되지 않으며, 탈북 이전의 자격이나 학력은 남쪽에서 인정되지 않는다(김현귀, 2019). 사회문화적으로 볼 때 대개의 남한 국민들에게 거리낌 없이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탈주민들에 대한 대중적 서술은 옹(Ong, 1996: 737)이 말하는 “문화적 주체화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합법적인 공동체 구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완전한 문화 시민권을 부여 받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언어, 행동, 이념의 가장 미묘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 이탈주민들은 계속해서 스스로를 타협해나간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지탱해온 순수한 한민족 신화의 기반은 한국 지역사회에 진입하는 북한 이탈주민들이 부정할 수 없는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새롭게 구성된 위계적 민족성이라는 개념 아래, 그들은 다소 종속적인 위치에 배정된다. 이탈주민들의 민족적 지위는 그들이 궁극적인 ‘타자’인 북한 체제 하에서 살아가던 다소 ‘오염된’ 배경을 탈피할 수 있을 때만 비로소 ‘우리’의 일원으로 인정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한국 민족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순수함’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마치 조지 오웰의 소설 속 유명 구절처럼 “모든 한국인들은 민족적으로 순수하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순수하다”는 명분으로 종속된 위치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된다.

#### IV. 세계화 시대 속 대한민국 국민 정체성 구축

과거 한국 사람들의 국민 정체성 구조는 꽤 단순했다. 한쪽에는 진실하고, 근대적이고, 선진화된 한국인들이 남쪽에 있는 반면, 저개발 되고 탈선했으며 때로는 잔혹한 북한 정권 하에 살아가는

주민들이 북쪽에 있는 이분법적인 구조였다. 그러나 세계화의 영향력이 커지고 북한 정착민들과 같이 복잡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면서, 기존에 이분법적이던 질서에 층이 더해졌다. 새롭게 구성된 위계적 민족성에 어떤 층들이 더해졌고, 한국인들은 구체적으로 그 위계적 구조 내에서 자신들을 어디에 두고 있을까? 마지막으로, 내부 민족적 위계질서의 형성은 어떻게 국가의 경계선을 완화시키는 대신 오히려 강화하는 경향이 있을까?

지속적인 국가 정체성의 문제는 특히 미래의 통일이라는 남은 국가적 과제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관심사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손(Son, 2016)은 한국이 최근에 “대중적 국가 정체성을 보장하고, 보호하고, 강화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국민들의 정체성을 재확인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족성의 관계적 측면, 즉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이 또 다른 ‘타자’의 민족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최근 세계화 물결과 외부 세계와의 끊임없는 접촉은 한국의 정체성을 확실히 다층화 시켰다 (Khazzoom, 2003). 예를 들어, 한국전쟁 이후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미국인들에 대한 두 개의 상반된 한국인 정체성을 확립했는데, 미국을 우호적인 제공자로 보거나 아니면 국가 통합의 단순한 방해자로 간주했다. 북한에 관해서도 두 가지 상반된 시선이 있었다. 그들은 북한을 고통 받는 동포 혹은 잠재적으로 위협한 적으로 여겼다. 신기욱과 부르크(Shin, Burke, 2008)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인들의 정체성은 현대사를 지나며 미국과 북한이라는 두 중요한 타자와 맞서 지속적으로 개념화되었다.

21세기에 북한 이탈주민들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게 되면서, 한국인들은 미국의 도움에 대한 ‘호의적인 수령인’와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제공자’ 라는 두 정체성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위계적 민족성의 구조 안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찾았다. 위계 속 자리가 높아질수록 민주주의, 인권, 다문화주의, 신자유주의 등과 같은 서구적 기준에 도달함으로써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것에 더 가깝게 보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존재했다 (Son, 2016). 반면에, 위계질서의 맨 아래에 있는 완전히 타자화된 적은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인들은 북한 이탈주민들의 민족적 위치를 높이기 위해 그들의 ‘서구화된’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한국 사회 속 유동적이고 다층적인 구조 내의 이러한 교차 정체성은 상당히 전례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한국 사회에서 민족주의자들이 그 동안 가장 눈에 띄는 반미 세력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남한에 정착한 북한 이탈주민들의 출현은 남한 ‘우리’와 북한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기존의 분기점 사이에 새로운 제3의 사회적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남한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Kim, 2012). 이 새로운 공간은 ‘우리-그들’의 경계를 더욱 가시화 시켰고, 동시에 한국의 ‘우리’ 속 또 다른 위계 질서를 구성하며 그 새로운 공간을 종속적 위치에 두는 수직적 구조로 변화시켰다. 이것은 냉전 시대와 그 여파에 존재했던 최초의 수평적 (그러나 이분법적) 민족 개념을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인들의 민족 정체성을 수직적 모양으로 재편성한다.

[그림1] 한국 민족 정체성의 분열 양상



이 삼중 정체성의 역동성은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입증된다(이진명, 김정범&안정훈, 2019). 조사 결과 83.8%의 시민이 북한 이탈주민들을 우리나라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나타나지만, 참가자의 9.4%만이 그들을 사위나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했다. 또 50% 가까이가 북한 이탈주민이 집 계약을 하러 올 경우 망설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매일 경제 신문은 한국 경제 연구원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 대부분이 이탈주민들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더 나아가서 그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는 상당한 심리적 저항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떻게 북한 주민들을 폭압적인 정권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남한 내에서도 보수와 진보 정당 사이의 첨예한 의견 충돌이 꾸준히 있어왔다. 그러나 양쪽 관점 모두 도덕적 의무를 다하듯 '구세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양당의 대북 정책, 보수 정당들의 봉쇄와 압박 정책과 진보 정당들의 관여와 햇볕 정책, 은 북한을 통일의 적극적 주체가 아니라 남한 주도로 통일을 해야 하는 소극적 타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타자화는 일반적으로 국제 인권 규범에 성공적으로 도달한 한국 사회의 높은 도덕적 기준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인 인도주의적 대응으로 형성된다.

그러므로 북한 이탈주민들의 '타자화'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인들의 정체성 정치는 "최근에 패셔너블한(fashionable) 문구로 여겨지는""민족 국가와 국민국가의 비동조화(decoupling of the nation and state)"를 정면으로 반박한다(이철우, 2010). 국가 간의 인구 이동이 점점 증가하면서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가 새롭게 변화하는 최근 지구화 시대에 대한 논의와는 대조적으로, 북한 이탈주민들의 사례와 위계적 민족성의 형성은 민족-국가 결합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재조정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시간이 갈수록 국가와 국가 사이의 유동성을 요구하는 탄력적인 세력은 지구촌 곳곳에서 발견되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민족 중심적이고 국가중심적인 제국주의(또는 오리엔탈리스트) 권력이 국경을 더욱 제한시키는 방식으로 세계화 물결의 도전에 맞서고 있다(이철우, 2010). 결국 이렇게 강화된 경계선은 한국의 국가 형성 과정을 재활성화시키는데, 이번에는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며 인종적으로 더 우월한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그 과정이 공고해진다.

## V. 결론

카줌(Khazzoom, 2003)은 이스라엘 내 소수민족거주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뒤, 내부적 민족 구분과 외부적 민족 구분의 긴밀한 연결성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현대 한국 사회 내에서 벌어지는 민족 담론의 상황을 보면 낯설지 않다. 1950년 분단 이후 북한과 남한 사이의 접촉이 최소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초반부터 급증한 북한 이탈주민들의 등장은 두 공동체 사이에 존재하는 유일한 비국가적 연결고리로서 세계화 시대 속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을 재정립하기에 충분히 영향력 있었다. 그 결과로 한국 사회 내 민족 개념은 계층화 되었으며 이런 내부적 위계질서는 결국 신자유주의 및 인도주의적 국가 모델로 향하는 남한 정부의 외부 국경선을 강화시켰다.

국가 정체성의 재구성은 수정된 민족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한 ‘다층적 타자화’ 과정을 포함했지만, 남한의 사례는 더욱 독특했다. 한국 사회 속 사람들은 단순히 북한 이탈주민들을 방 밖으로 내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3의 사회적 공간을 남기는 계층 구조를 도입하여 사다리를 계층화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 나름대로 민족 정체성에 영향을 미쳐, 한국인들의 국가 정체성을 3단 구조로 나누었다. 냉전의 영향으로 한국 민족이 ‘진정한’ 남한 사람들과 ‘탈선한’ 북한 사람들의 이분법으로 나뉘는 동안, 북한 이탈주민들과의 만남은 기존 경계선 사이의 ‘새로운 사회적 공간’을 가져왔다. 새로 만들어진 이 사회적 공간에 따른 혼란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인들은 그것을 수직적인 모양으로 수정하며 그들의 민족적 경계선을 재조정했다. 한국의 민족성은 여전히 국가적 집단으로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위계적 개념에 따라 다시 형성되었다.

현대사를 통해 한국 사회가 북한 이탈주민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바라보고, 이름 붙였는지 되돌아보면, 이탈주민들의 정체성은 변화하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국가의 이익에 달려 있었음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 한국의 북한 이탈주민들을 둘러싼 담론은 언제나 대한민국 국가 건설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축이 될 것이다. 제3세계 국가 건설을 위한 주요 기능에 대한 코타르니(Kotharni: 11)의 이론으로 돌아가서, 남쪽의 북한 정착민들을 둘러싼 정책과 담론은 국가 건설 메커니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과 크게 일치했다. 통일부가 북한 이탈주민 집단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지속하면서 21세기 초부터 유입된 북한 정착민들에 대한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기관(하나센터)과 정책(성공적인 적응 사업)이 만들어졌다. 정부가 ‘훈육적’ 권력을 사용한 것은 한국판 신자유주의 국가를 강화하는데 유리한 자립적 자원으로서 이탈주민들의 정체성을 강요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위계적 민족성의 형성은 국민 통합을 유지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남한 정체성의 혼란과 긴장을 줄이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한반도 통일에 관한 현재의 정책들은 수평적이고 단일한 혈통의 민족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기반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국가 건설 과정 또한 그 사회의 미묘하지만 강한 민족적 분열에 대한 더 깊은 고려가 없는 방식으로 굳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한반도 통일을 둘러싼 담론은 훨씬 근본적인 차원의 논의 속에서 다뤄져야 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연구와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에 그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현재로서는, 그들이 남한과 북한 사이의 유일한 비국가 행위자라는 사실을 떠올렸을 때,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한다.



성경은 인간에 대한 동등한 관점을 천명한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새로워진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3:28)고 선언하였다. 인종, 성별, 신분에 따른 철저한 계층화가 이루어진 고대 로마사회에서 이와 같은 성경의 사상은 인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과 질서를 제시한 것이다. 오늘날에는 외적으로 뚜렷한 제도적 계층화는 허용되지 않으나, 동질적인 민족이나 사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대상화와 타자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는 기독교 세계관을 토대로 한 사회적 관계 연구에서 면밀하고 예리하게 관찰해야 할 영역일 것이다.

## 참고 문헌

### 1차 자료

- 채널A (검색일 2020년 8월 26일). <https://www.youtube.com/watch?v=C4DdTAapVRE>.
- 구보라 (2017년 7월 12일).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60799>.
- 정철운 (2014년 11월 14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031>.
- 김병연 (2016년 10월 20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0749315#home>.
- 남북하나재단 (검색일 2021년 4월 3일). <https://www.koreahana.or.kr/intro/sub01.j>.
- 남북하나재단 공식 블로그 (검색일 2021년 4월 13일). <https://blog.naver.com/nkrfblog/221622371900>.
- 한국 법제 연구원 법령 번역 센터 (검색일 2021년 5월 21일)  
[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lang=ENG&hseq=1](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lang=ENG&hseq=1).
- 대한민국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책 (검색일 2021년 4월 14일).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ately/>.
- 대한민국 통일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검색일 2021년 4월 14일)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Mplan/Pabout/>.
- 이진명, 김정범&안정훈 (2019년 10월 21일).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10/855698/>.
- 동아일보 1983. 4. 14일자 “이웅평의 귀순”
- 선담은·서혜미 (2019년 8월 14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5709.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5709.html).
- 손진석 (2021년 1월 3일).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europe/2021/01/03/7UEI25ZKONCDJD3HDIPW452S4Q/>.
- 통일부UNITV (2020년 3월 3). <https://www.youtube.com/watch?v=xZ3nZEzQEEA>.
-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trieved 21 May 2021).  
<https://www.ohchr.org/EN/HRBodies/HRC/CoIDPRK/Pages/CommissionInquiryonHRinDPRK.aspx>.

### 논문 및 단행본

- 강진웅 (2011). “한국 시민이 된다는 것: 한국의 규율적 가버넌스와 탈북 정착자들의 정체성 분화.” 『한국사 회학』45(1). 191-227.
- 강진웅 (2013). “대한민국 민족 서사시: 종족적 민족주의의 전개와 그 다양한 얼굴.” 『한국사회학』47(1). 185-219.

- 김동춘 (2018). “한국형 신자유주의 기원으로서 반공자유주의” 반공국가, 발전국가와 신자유주의의 연속성.” 『경제와 사회』 6. 240-276.
- 김명준·임종섭 (2015). “탈북자의 미디어 등장과 ‘북한정보’ 흐름의 변화 - ‘통제’에서 ‘경쟁’으로.” 『Social Science Studies』23(2). 56-87.
- 김현귀 (2019). “북한 주민들의 지위.” 『통일헌법연구』1. 1-82.
- 김화순 (2019). “분단체제 탈북민 정책의 인식과 이행과제: ‘배제적 통합’의 영속화에 대한 비판.” 『이화젠더법학』 11(3). 67-106.
- 김화순·최대석 (2011). “탈북이주민 정착정책의 인식과 과제: 정착지원을 넘어 사회통합으로.” 『통일정책연구』 20(2). 37-73.
- 김화순·전태국 (2018). “탈북인의 신민적 정치참여.” 『통일과 평화』10(1). 317-370.
- 남북하나재단 (2015). '먼저 온 통일' 북한이탈주민의 착한 공감 : 북한이탈주민, 우리의 着韓 이웃입니다. : 북한이탈주민 착한(着韓)사례 모음집. 서울: 남북하나재단.
- 박영자 (2005). “분단 60년, 탈북자와 남북관계: 역사적 추이와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9(1) 233-258.
- 박은아 (2017). “한국 정부의 탈북민 신자유주의적 주체 만들기 통치성에 관한 연구: 착한 이웃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인문학』72. 169-196.
- 박현선 (2002). “타북자 국내 정착정책의 현황과 발전 방향.” 『북한연구학회보』6(1). 209-240.
- 박흥서 (2016). “냉전기 한국의 국가폭력과 미국의 대응.” 『통일과 평화』8(1). 45-78.
- 백낙청(1994), 『분단 체제 변혁의 공부 길』, 창비.
- 설동훈 (2020). “민족의 위계화? 통일시대의 한민족과 타자들.” 『담론201』23(1). 7-60.
- 송은희·신은성 (2012).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본 탈북자 정책에 관한 연구.” 『글로벌정치연구』5(2). 7-30.
- 신난희 (2015). “남한사회 탈북단체의 활동과 인정의 정치: 국내외의 정치적 맥락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21(2). 329-356.
- 신난희 (2019). “분단 디아스포라와 탈북이주민의 과잉 정치참여 활동 사례 연구: 제 19대 대선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72. 75-109.
- 이기영 (2005). “소수자로서의 북한이주민의 문제와 사회복지의 과제.” 『통일연구』9(2). 157-198.
- 이수정 (2017). “탈북자 심리의 문화정치.” 『현대북한연구』20(2). 310-356.
- 정병호 (2004). “탈북 이주민들의 환상과 부적응: 남한사회의 인식혼란과 그 영향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10(1). 33-62.
- 전우택 (2000).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과 심리갈등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1. 67-91.
- 정광호·김민영·금현섭 (2010). “탈북자지원정책의 새로운 이해 -문제정의의 관점에서.” 『한국정책학회』 19(1). 71-101.
- 정영훈 (2010). “민족 정체성 그리고 한민족의 민족 정체성.” 『한민족연구』 9. 1-29.
- 정정애·손영철·이정화 (2013).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동기와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적응유연성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22(2). 215-248.
- 조영아·전우택 (2005). “탈북 여성들의 남한 사회 적응 문제.” 『한국심리학회』10(1). 17-35.
- 전재호 (2012). “민주화 이후 한국 민족주의의 변화: 통일, 북한, 미국, 외국인, 재외동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5(1). 91-123.
- Anderson, B. (2006). *Imagined Communities*. London: Verso.

- Castells, M. (2009).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Berkeley: Wiley-Blackwell.
- Fairclough, N. (2013)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he Critical Study of Language*. Oxfordshire: Routledge.
- Foucault, M. (1977). *Surveiller et punir: Naissance de la prison*, transl. A. Sheridan. London: Gallimard
- Hobsbawm, E.J. (1992).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ugh J. & Bell, M. (2020). "North Koreans' public narratives and conditional inclusion in South Korea". *Critical Asian Studies* 52(2). 161-181.
- Khazzoom, A. (2003). "The Great Chain of Orientalism: Jewish Identity, Stigma Management, and Ethnic Exclusion in Israel."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8(4). 481-510.
- Kim, C.N. (2009). "State and Nation Building in South Korea: A Comparative Historical Perspective."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12(1). 121-150.
- Kim, S.K. (2012). "Defector, Refugee, or Migrant? North Korean Settlers in South Korea's Changing Social Discourse." *North Korean Review* 8(2). 94-110
- Kothari, R. (1976). *State and Nation Building*. Bombay: Asia Book Corp of Amer.
- Lee, C.W. (2010). "South Korea: The Transformation of Citizenship and the State-Nation Nexus."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40(2). 230-251.
- Ong, A. et al. (1996). "Cultural Citizenship as Subject-Making: Immigrants Negotiate Racial and Cultural Boundaries in the United States." *Current Anthropology* 37(5). 737-762.
- Seol D.H. & Skrentny, J.D. (2009). "Ethnic return migration and hierarchical nationhood: Korean Chinese foreign workers in South Korea." *Ethnicities* 9(2). 147-174.
- Shin, G., & Burke, K. C. (2008). North Korea and identity politics in south Korea. *Brown Journal of World Affairs*. 15(1), 287-304.
- Shin, G.W. (2006). *Ethnic Nationalism in Korea: Genealogy, Politics and Legacy*. Redwood City: Standford University Press.
- Son, S.A. (2016). "Identity, security, and the nation: understanding the South Korean response to North Korean defectors." *Asian Ethnicity* 17(2). 171-184.
- Tilly, C. (1990). *Coerc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s, AD 990-1990*. Oxford: Basil Blackwell.
- Zhe, X.M. (2020). "Diaspora Identity and the Historical Ownership of the Ethnic Korean Community in China." *The Humanities of Coexistence* 3. 65-97.